

수신 :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지선

발신/민원인 : [REDACTED]

제목 : 쿠팡 물류센터 점검 결과 확인 요청

1.

2025년말 이루어진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손명수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 및 불법 사항에 대한 점검을 차관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발신(민원인)은 손명수 의원에게 쿠팡 자료를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손명수 의원의 지적 이후 차관님께서서는 곧바로 현장 점검(2026.1.7)을 하시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장 점검 이후 결과에 대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쿠팡 곤지암 물류센터의 복도의 유효폭(1.0m)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셨고 그에 합당한 행정 및 사법적 조치를 내리셨는지요?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최초 신고시 합법이라는 판단을 했으나 국토부의 현장 점검 후 불법으로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허가부터 불법 발생, 판단 변경 및 이후 행정조치들에 문제가 없는 지 면밀히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쿠팡은 근로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 일반 복도도 아닌 피난 복도를 줄여서 수 년간 사용했습니다. 불법 사실의 발생 과정부터 확인해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자체에 맡겨 놓으셨나요?

3.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는지요?

국토부의 질의응답에 의하면 ‘적층식 랙’이 작업을 위해 사용되면 설비가 가
난 거실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적층식 랙’의 설치는 허가사항입니다.
당연히 쿠팡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불법이며, 당연히 원상복구의 시정명령
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설비시설로 둔갑시켜 각종 세금을 축소했던 사
실 등도 함께 조사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쿠팡의 적층식 랙에 대해 최초 불법이라 판단한 후 시정명
령을 예고하였으나, 쿠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복도의 유효폭을 합법에서 불법(국토부 조사 이후)으로,
적층식 랙은 불법에서 합법(쿠팡의 이의신청 이후)으로 바꾸었습니다.
넌뛰기하는 행정방식에 민원인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토부의 ‘적층식 랙’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장까지 가보셨으니 쿠팡이 주장하는 대로 그 공간이 ‘적층식 랙’에 해당하
는 ‘설비’인지, 허가가 필요한 ‘거실’인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에 근거
하여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